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법왜곡죄' 필버 돌입

법왜곡죄 대상 형사사건 한정...오늘 토론 종결 뒤 국회 표결 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안 등 사법개혁법 순차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해야 한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난 뒤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민주당은 개정안 상정 직전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조문 일부의 추상성 등이 워낙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원안에서 '법왜곡' 행위를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할 경우 등 3가지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들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워낙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 법안에는 간접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 뒤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 개정안),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법 등도 같은 방식으로 순차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선 코앞인데...출구 못 찾는 '절운'

국힘, 중진들도 "이대론 어렵다"...당권파, 노선 토론 요구 무대응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심 공략 기초와 맞물린 '절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헛바퀴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소장파에 이어 당 중진들도 "이대로는 선거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으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가 절운 요구 자체를 담을 분열시키는 여당의 술수라는 차원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노선 토론 요구에는 사실상 무대응하면서 내상만 깊어지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는 25일 당 노선 문제 논의를 위한 소장파의 의총 소집 요구와 관련, 다음 달 3일 이후 개최 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6박 7일간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의총은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야 열 수 있다"고 했다.

당내 초·재선 개혁 성향 의원이 주축인 모임 '대안과 미래'는 "과연 '윤 어게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며 이날 의총을 소집해줄 것을 전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3일 3시간 동안 의총을 진행했으나 정작 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들막'이란 비판도 나왔다.

노선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도 아랑곳 없이 장 대표는 '마이웨이' 일정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기 위한 부동

산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전날 "국민은 지금 절연에 대한 논쟁으로 서로 싸우는 것보다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을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장 대표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는 26일 오전 면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진들의 의견이 제각각인 만큼 면담에서는 중진들이 각자의 의견을 장 대표에게 전달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27일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장 대표를 겨냥한 차별화 행보를 한다.

이를 두고 친장(친장동혁)계로 분류되는 일부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은 친한계 의원들이 한 전 대표 일정에 동행할 경우 당헌상 계파 활동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혁신당 "지선 공천,尹정부 공직자 배제"

"내란·극우 세력 심판의 장 돼야"

조국혁신당은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임명돼 재입한 공직자 등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내란·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전국적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국힘(국민의힘) 제로'라는 목표를 내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임명돼 재직하던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을 비롯한 공직자, 최근 4년간 국민의힘 중앙당 또는 사·도당에서 주요 당직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해 서류심사부터 부적격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던 자, 선거 출마를 위해 다른 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자 등도 부적격 대상자들이다.

반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12·3 비상계엄

과 '내란' 극복에 공을 세운 자에게는 경선 시 15% 가산점을 부여한다.

혁신당은 여성·청년의 진입 장벽을 걷어내는 '장벽 제로'와 비위를 엄정하게 다루는 '부패 제로'를 또다른 공천심사 기준으로 내세웠다.

장벽 제로를 위해 45세 이하 청년에 중앙당 공천 심사비 전액 면제, 후보자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차등 지원 등 혜택을 준다. 여성·청년 후보에게는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최대 30% 가산 점도 있다.

혁신당은 이번 주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고 내주부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타 지역 통합 보류 예산 '전남광주'에 우선 배분해야"

정준호, 특별시장 후보 공개 토론 제안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의원이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초기 2년간 20조원을 포함해 4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법 통과 시 초기 동력 확보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등 타 지역의 통합 논의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유호 인센티브 예산 중 5조원을 광주전남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속한 통합 추진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자 선도 모델에 대한 전략적 투자라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3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지역의 향후 100년을 결정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투명한 집행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향후 선출될 통합특별시장 후보자 전원에게 정책 공개 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토론에서 미래 산업 전략과 일자리 창출 방안,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도시 구조 설계 등을 시민 앞에서 직접 검증받자는 취지다. 아울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과 대통령 간의 공식 면담도 요청했다. 초광역 통합의 구체적 방향과 재정 지원 규모를 국정 최고 책임자와 직접 논의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정 의원은 "최적의 통합 방향은 밑질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찾아야 한다"며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초광역 성공 모델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스 해볼래?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6M7T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p>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p>	<p>각 보험회사 대표번호</p>
<p>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p>	<p>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p>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